

다산포럼



전향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국민연금 제도 개혁 어디로 가나?

준(20.3만 엔)이다. 한국의 GDP에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국민연금 급여가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자조 섞인 지적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일명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이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1년간 국민연금 관련 세 개의 소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세 개 소위원회의 논의를 집약한 안은 이미 2018년 8월 중순 복지부 주최 공청회에서 소개·공표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제3차 재정 추계 때의 것보다 앞당겨진(2062)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용돈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특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금 소진 연도가 앞당겨진다는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 이런 냉랭한 반응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은 예정보다 몇 달 늦게 12월 하순경에 발표되었다. 사실 2017년부터 세 개의 소위원회가 1~2년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혁의 큰 줄기를 제시했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최종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정부안의 내용이었다. 정부는 제도 개혁안을 사지선다형 식으로 열거해 놓았을 뿐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이 두 가지 비율을 동시에 인상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현행 유지 방안(제1안)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제2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2021년

부터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까지 12% 수준으로 인상하는 제3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올려 2036년에 13% 수준까지 인상하는 제4방안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소진 시점이 2062년쯤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12월 복지부가 제시한 사지선다형 방안이 2019년 사회적 합의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의 최종 개혁안으로 등장할지 자못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이번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 내지 장기 재정 건전성 달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고 깊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출발점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의 엄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지속적인 점검과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교단에서



김진우  
일신중 교감

## '삼고 학생부'(三顧 學生部)

이었다. 담임과 부장을 희망하는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어서이다. 교사들에게 업무를 희망하고 싶지만 할 일이 아니다. 특히 학생부장은 더욱 그렇다. 학생 지도를 통해 얻는 보람도 있지만, 민원이나 송사에 시달려 지쳐가고,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는 부서가 학생부다.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지금도 많이 쓰이는 고사성이 중에 하나이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27세 제갈량을 찾아갔으나 출타 중이었다. 며칠 후 눈보라를 헤치고 두 번째 찾아갔어도 만나지 못했다.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능을 가진 천하의 공명 선생께 난세를 수습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왔다. 봄이 되어 세 번째 찾아갈 때에는 더 예를 갖춰 하마(下馬) 후 걸어서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았다.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비는 땀을 아래서 손을 모으고 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 자신의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았어 정성에 감동한 제갈량은 유비를 따르게 되는데 '출사표', '천하삼분지계'는 그의 전략과 신의에서 나온 단어이다.

교무실에서 학생부까지는 50여m 거리이다. 염치없는 부탁 때문인지 발걸음이 무겁고 별개만 느껴졌다. 2번째 학생

부장을 맡고 있는 K선생님을 또 찾아가다. '잘 부탁한다'는 말에 웃기만 했다. 오리 물 털 듯 하지는 않았지만 거절의 뜻은 완고했다. 교장 선생님도 K선생님을 찾아가 간청했다. '2년 연속 학생부장을 맡아 지쳤고, 이제 학생들이 피하는 교사가 아니라 진밀하고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며 고사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업무이다. 삼고초려가 아니라 학생부를 열 번 찾아가서라도 부탁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몇 차례 더 만난 후에는 흔쾌히 받아들여서 새 학기 업무 분장을 마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 형편이 이렇다.

교육부는 지난 달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자체 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이다. 그리고 2020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격무를 줄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학생 간에 경미한 사안 즉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것, 보복 행위가 아닌 것' 등 네 가지 사안이 학교 전담 기구에서 확인할 경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또한 가해 학생 9단계 조치 중에서 서면 사과(1호),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조치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대체로 환영하는 편이다. 학교의 은폐가 염려스럽고,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피해 학생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개혁이라며 큰 입점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몇 가지 통계를 보면 단위 학교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지 알 수 있다. 학폭위 심의 건수가 1만 9830건(2015년), 2만 3466건(2016년), 3만 990건(2017년)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3만 건이 넘는 심의도 버겁지만 1800여 건은 재심을 청구했고, 640여 건은 행정 소송까지 갔으며 이중 40%는 법원에서 뒤집혀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3월 개학부터 당장 시행되지 않아 아쉽다. 국회 법률 개정과 교육부의 시행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생활부장 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으로 줄였다. 획기적인 조치이다. 앞으로도 생활 지도나 학폭 업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 마한 문화의 복원과 과제

는 먼저 그 구체적인 실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옛 모습을 복원하고 확산시키는 몇 단계에 걸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은둔의 작은 왕국 집단'의 장막을 걷어내고 현장하는 일은 지역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이 필수 불가결한 방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마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고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한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정립하기 이전 존재하였던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삼한에 속하는 일개 부족 국가로 치부됐다. 따라서 마한의 강역과 변천 과정, 정치적 구조, 대외관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유적지를 복원하는 등의 연관된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54개 소국이 존재하였다는 마한 지역 곳곳을 세부 권역으로 나누어 순례길 탐방 코스를 개설하면 역사 교육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대규모 고분에 의해 고 실상이 여실히 표출되고 있는 마한 역사의 현재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국립나주박물관과 더

불어 영암 지역에도 분관 형태의 박물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명이 아닌 주제를 가진 국립마한박물관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마한의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안팎관으로 '마한 역사문화 테마파크' 건립이 광주·전남 지역 사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에 조성되었지만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영암 시종면에 있는 '마한문화공원'이 테마파크의 모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을 핵심 공간으로 하여 나주와 영암 두 지역에 걸쳐 충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테마파크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왕인이 살았던 시기로 알려진 4세기 중반의 한반도 서남부 지역은 아직 백제 영토로 편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왕인은 백제 인물이 아닌 마한의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마한 정통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한이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관

통하는 국가의 변천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한 나라 체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옛 가야권역을 대상으로 가야사의 복원을 위해 203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려 108개에 달하는 단위 사업에 1조 726억원 규모의 거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초대형 학술 및 문화 관련 사업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근래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광양, 남원, 장수 등지의 고분 발굴 작업으로 가야의 권역이 호남 경제 지역까지 미쳤음을 실증하는 상황까지도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는 왕국과 잃어버린 왕국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의 마한 역사 복원 사업 추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뛰어난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한 자긍심의 배양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복원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백제의 선주 세력이자 고대 문화의 뿌리인 마한의 실재를 파악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 社說

### '5·18 왜곡 처벌법'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3당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5·18에 대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3당은 물론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및 무소속 의

원까지 함께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16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166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5·18 왜곡 처벌법'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여태껏 처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사자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현행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인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단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도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반복되는 악역적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일본 사죄 못 받고 끝내 별세한 심선에 할머니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징용됐던 심선에 할머니가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광주에서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일본으로부터 한마디 사죄의 말도 듣지 못한 채 끝내 눈을 감았다고 안타까운 일이다. 심 할머니의 묘소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6·25 참전 용사인 남편의 묘소가 있는 광주 망월역3리 공원에 마련됐다.

심 할머니는 1930년 광주 북구 북동에서 태어나 14세였던 1944년 3월 광주 북정공립초등학교(현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다. 당시 그

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뒤 심 할머니는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배고픔과 매질로 인한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던 심 할머니는 해방 후 귀국해서 강제징용을 겪은 남편과

만나 2남 4녀를 두었다. 심 할머니의 아들 조 모 씨는 "어머니는 광주에서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2014년 심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국내 1·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의 항소로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 할머니 소송뿐만 아니라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1·2차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많다. 해당 법원들은 재판을 서둘러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 역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1917년 4월 9일 스위스의 취리히 중앙역에서 이른바 혁명열차가 기적을 올린다. 열차에는 레닌과 그의 보좌관 및 동료 등 32명이 타고 있었다. 레닌은 10년간의 망명 생활을 접고 고국 러시아로 귀국하는 길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2월 혁명으로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공화정의 임시정부가 들어서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꿔 온 레닌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혁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레닌은 적대국인 독일 통과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닌의 통과 제안에 어찌 된 일인지 독일 정부도 기꺼이 응했다. 전쟁 반대론자인 레닌을 이용해 러시아가 동부전선에서 이탈하면 독일은 서부전선에 집중해 1차 대전을 승리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레닌에게 안전 통고를 보장하면서 급행열차를 제공했다. 열 객차와 단절시켜 봉인열차로 불린 이 혁명열차에는 치외법권이 적용돼 레닌 일행은 독일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부터 8일간 4개국을 거친 3200km의 대장정 끝에 레닌은 4월 16일 목적지인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했다. 그리고 6개월 뒤 10월혁명을 성공시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다. 레닌의 혁명열차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열차 대장정으로 기록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2차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행 수단으로 열차를 택했다. 비행기로 다섯 시간이면 갈 곳을 사흘간 4500km의 열차 대장정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들어 북·중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중국 개혁의 상

징인 광저우를 지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선 목표와 부산에서 철도를 타고 동남아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탁현민의 지적처럼 김정은의 열차 대장정은 이번엔 측면에서 탁월한 선택임에 분명하다. 레닌이 혁명열차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뤘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대북 제재 해제에 따른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가 목표라면 이번이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 카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 기 고



김형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마한은 단일 국가가 아닌 BC 1~기원 후 3세기 무렵까지 한강 유역으로부터 충청·전라도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 분포되어 있던 부족 연맹의 집단들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마한 지역에 위치한 54개 소국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는데, 큰 곳은 1만여 호(戶)부터 작은 곳은 수천 호에 이른다. 마한 소국 연맹체의 맹주는 목지국의 진왕(辰王)이었다. 마한을 형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고예택적이 남하하여 자리를 잡아 형성한 토착 집단이라는 견해가 있고,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북마한(北馬韓)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세력이라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백제에 흡수·합병되어 잊혀진 고대 국가로 여겨온 마한 역사의 복원을 위해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燦</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